

성향 극과 극... 합의 글썩요?

여야 미디어법 국민위 소속 위원 확정 여론수렴·회의 방식·약칭 싸고 신경전

여야는 12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12일 한양대 김우룡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0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도 이날 연세대 강성현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를 필두로 추천 위원 8명을 모두 선정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고르대 박경신 교수 등 2명을 추천했다.

위원회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100일간 토론을 벌이며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추천 위원들 간 입장차가 극명해 치열한 논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약칭과 회의 공개 여부, 여론수렴 방식 등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약칭과 관련,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약칭을 '미발위'로, 민주당은 국민 여론수렴이 우선이라는 데 역점을 뒀고 '국민위'로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다. 또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 한나라

당은 "회의를 전부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일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철저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민에게 논의 내용을 알리고 이것이 국민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면 공개로 맞서고 있다.

이밖에 여론수렴 방식 역시 한나라당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만큼 논의 결과를 참고해 입법에 반영하면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측 민간위원 8명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시각을 비판하고 나서 초반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측 위원 전원은 이날 공동 성명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틀리기가 아니다"며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더더욱 아니다"고 한나라당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언론 자유 발전과 여론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장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틀리기가 구로 전락시키는 듯 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위원회 회의 공개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참여인사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경 20조 이내로" 강운태 의원 주장



강운태 의원은 12일 정부의 슈퍼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의 규모는 GDP의 2% (20조원)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하여 추경의 편성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조원 가운데 50%는 금년도 세수결손분(10조원) 그리고 나머지 50% (10조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한정 사용돼야 한다"며 "추경의 재원인 국채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발행의 방법과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추경편성과 병행하여 시중의 부동자금 500조원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국민희망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 펀드는 정부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투자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그리고 (디자인) 문화산업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4·29' 전주 덕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 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안내로 직능단체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마냐" "불출마냐" 민주, 정동영 오늘 입장 표명 촉각

정 전 장관 측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일 기자회견에서 정 전 장관이 정계복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의 인천 부평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정 전 장관에 부담이 큰 전주 덕진보다는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전 장관 측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일 기자회견에서 정 전 장관이 정계복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의 인천 부평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정 전 장관에 부담이 큰 전주 덕진보다는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전 장관 측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일 기자회견에서 정 전 장관이 정계복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의 인천 부평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정 전 장관에 부담이 큰 전주 덕진보다는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일 못하는 빈곤층에 최대 月 35만원 준다

■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 만들어 지원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가구 260만명을 생계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경기침체로 곤경에 빠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기초생활·긴급복지 추가=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서 재산은 8천500만원 미만인 계층 약 97만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가구주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도 실직과

휴·폐업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으로 넓히면서 3만가구 8만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천88억원으로 늘어났다.

◇근로능력 없는 가구 현금 12만~35만원 지원=새로 도입된 맞춤형 제도는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용자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맞춤형 제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구호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자산은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

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 이상은 35만원 등 평균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전체 금액은 5천385억원에 달한다.

◇일할수 있으면 공공근로 월 83만원=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다. 의환위기 이후 공공근로제가 부활한 것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만가구(이들이 속한 가구인구는 86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들에게 하루 3만2천800원씩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총 2조5천605억원이 들어간다.

다만 지급방식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50%와 현금 50%로 섞어서 준다. 정부는 일단 소비쿠폰을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네 가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한나라 25명 신청... 6.3대 1 민주당 공천심사위 구성

정치권 재보선 체제 전환

정치권이 4월 재보선 체제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천신청을 마감했고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한나라당=11일까지 경주와 인천 부평을 등 전국 4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대한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주에 7명 25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주의 경우 친이계의 정종복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친박 성향의 정수성 전 육군대장은 신청을 하지 않아 공천 경쟁은 피한 채 보선에서 결전을 벌이게 됐다.

경주는 정 전 의원을 포함해 김순직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하 재경 경주항우회 이사, 최윤섭 전 경주 부시장, 황수관 한나라당 중앙위 상임고문, 황진홍 전 경주 부시장 등 6명이 공개 신청했고, 신종복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이 비공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1차 회의를 갖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천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2일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심사위원회 7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4·29 재보선 체제로 돌입했다.

공심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박선숙 홍보위원장, 신문식 조직담당 사무부총장 등 4명의 당 출신 인사가 합류했다. 외부인사로는 장하진 민주정책연구원 이사(전 여성부장관)를 비롯해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손혁재 정치평론가 등 3명이 임명됐다.

김유정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심위는 이르면 13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오 워싱턴 생활 정리 10일간 美 횡단 후 귀국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13일부터 귀국을 위한 마지막 여정에 나서면서 약 10개월간의 미국 워싱턴 생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9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 5월26일 미국 유타주에 올랐으며, 그동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해 왔다.

이 전 의원은 13일부터 10일 동안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홉킨스대 한국인 교수들과 함께 차량 2대를 이용, 13일 워싱턴을 출발해 4천km 가량을 달려 22일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예정이다.

횡단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미 이삿짐을 꾸린 상태다. 횡단을 마친 직후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서다. 이 전 의원은 22일께 로스앤젤레스 도착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10개월이 되는 3월26일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9 영광방문의 해

2009 영광방문의 해 선포식

원시 2009.3.14(토) 13:00~16:00

장소 영광 스포터움

주최 글로벌영광주진위원회